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종속

—CMEA를 중심으로—

表 鶴 吉*

<차례>	
I. 서 론	IV. 교역구조의 변화와 종속의 심화
II. 사회주의 경제권의 발전과 통합	V. 자본이동을 통한 종속성의 강화
1. CMEA의 자체평가	1. 자본이동의 평가
2. 대립되는 평가	2. 자본이동의 형태
III. 무역구조상의 종속성	VI. 결 론
1. CMEA의 자체평가	
2. 소련의 대동구무역구조	

I. 서 론

남미 학자들에 의해 胚胎되고 확산되어 온 종속이론은 남미의 발전경험을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전세계적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간의 비대칭적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큐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소련을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병합된 경험이 없으며 따라서 종속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자본주의 체제만의 문제로 인식되 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갈퉁(Galtung, 1971)은 제국주의론의 맥락에서 사회주의 체제내의 중심-주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레이(Ray, 1973)는 종속이론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내에서의 종속관계를 동한시한 것에 대해 통박한 바 있다. 그 후 이 문제는 길버트(Gilbert, 1974)에 의해 재론되었는데 그는 주로 소련과 동구제국간의 관계를 총량적인 경제성장의 관점에 국한시켜 분석한 바 있다. 갈퉁(1976)이 지적한대로 사회주의 체제내에도 제국주의는 엄연히 존재하며

* 서울대 사회대, 국제경제학

부분적 제국주의(Sub-imperialism)의 형태로 계속 확산된다고 볼 때, 종속의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종속의 연구를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로 확장시킬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종속론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행한 것과 같은 종속(dependence)내지는 종속성(dependency)에 대한 분석이 이론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카포라소(Caporaso, 1978)의 견해를 따라, 종속을 국가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로, 종속성을 한 국가의 자치성(autonomy)의 상실로 구분하여 이해할 때 이러한 분석적 개념이 사회주의 체제내의 국가간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사회주의체제는 물론 생산양식, 분배구조 및 대외거래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와는 판이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라끌라우(Laclau)나 브레너(Brenner)가 지적한 종속이론의 취약점, 즉 국가내의 계급구조나 생산양식에 분석의 층점을 못맞추는 맹점이 보다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는 사회주의체제하의 종속상황을 자본주의 체제하의 종속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종속이론의 모체는 사실상 식민지적 종속구조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프랑크(Frank, 1972)의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큐바를 제외한 사회주의국가들이 대부분 식민지병합에서 제외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 더욱 더 중요한 점은 현존하는 사회주의체제내의 중심부가 주변부를 식민지로서 지배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두 체제간의 역사적 배경면에서의 비대칭성을 염두에 둘 때 두 체제간의 종속상황에 대한 비교분석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비교분석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자본주의권에 속하는 주변부 나라들이 사회주의권에 속하는 주변부나라들보다 훨씬 다양한 산업발전의 단계, 문화적 배경 내지는 지역적 분포를 갖고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큐바는 자본주의적 종속구조에서 사회주의적 종속구조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의 흥미를 끈다. 파겐(Fagen, 1978)의 평가에 따르면 적어도 무역구조면에서나 소련에 의한 원조면에서는 큐바의 脫從屬이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가령 큐바혁명전의 10년(1949~58) 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큐바총수입액의 75%를 차지하고 반대로 수출

이 큐바총수출액의 6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초에 이르러 큐바의 대외무역규모의 $\frac{2}{3}$ 가량이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속의 주체만이 바뀌었지 脫從屬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수출상품의 구성을 보면 혁명전에와 마찬가지로 설탕, 엽연초, 니켈 등 1차상품이 전체 수출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혁명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비군사적 경제 및 기술원조액은 혁명전 미국으로 받은 원조를 훨씬 초과하였다. 가령 제 1차 오일파동이 있던 시점에도 원유는 배럴당 5.66달러에 공급되었고 유상원조에 대한 이자 및 상환조건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었다.

파젠은 이와같은 이유로 큐바가 완전한 脱從屬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구조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곧 종속성의 심화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다.

- 모든 공업생산, 금융, 대외거래, 농업 및 상업의 국유화상태에 있다.
-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사회적 필요성 등 다양한 기준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에 결정된다.
- 임금·가격·배급정책 등이 소득분배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안된다. 부족과 어려움이 발생하면 사회계층간에 부담이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노력한다.
- 생활의 질적수준이 향상되었다. 큐바는 남미에서 국민이 기본적인 영양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보건·교육면에서도 다른 남미국가보다 훨씬 나은 제도를 갖고 있다. 임금격차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이며 실업이나 종속·성적 차별이 거의 없는 사회이다. 사회계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都農間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즉 파젠은 큐바 역시 상당한 정도의 취약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큐바경제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속박”(condition)할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큐바가 주변부자본주의(peripheral capitalism)로부터 발전적 사회주의(derevelopmental socialism)로 변환하려는 어렵고도 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큐바에 적용한 기준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혁명전의 큐바와 같은 상황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과 地政學的인 고려를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도 큐바와 유사한 발전패턴을 어느정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과 중공이라는 종속에의 兩軸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地政學의in 위치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같은 歷史的, 地政學的 考慮이외에도 우리는 파센이 평가기준으로 삼은 여러가지 국민생활의 質的 指標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실증적인 문제에도 봉착하게 된다. 설사 우리가 경제통계에만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경제권내에서의 자본이동통계는 그라자아니(Graziani, 1986)의 지적대로 극히 희박한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권에서의 종속문제를 경제성장지표와 무역구조, 교역조건 및 부분적인 자본이동의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종속의 구조파악에 있는 것이지 종속성의 판단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권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지표들은 일반적인 從屬의 徵表들이며 특히 무역구조와 교역조건의 변화는 흔히 종속으로 통하는 橋樑이 됨을 지적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주의경제권은 보통 西歐에서 COMECON이라고도 부르는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이다. CMEA는 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큐바, 동고 및 베트남의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명목적으로는 알바니아도 회원국이지만 보통 제외되며 유고는 준회원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통계가 이용가능한 소련과 東歐諸國間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분석의 중심적인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하에는 먼저 제 2 장에서 1960년이후의 CMEA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경제권의 형성을 개관한다. 제 3 장에서는 무역구조상 소련을 중심국가로 하는 종속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제 4 장은 교역조건의 변화를 통한 종속의 심화과정을, 제 5 장에서는 자본이동을 통한 종속성의 강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제 6 장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경제권내

에서의 종속구조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시도한다.

II. 사회주의경제권의 발전과 통합

CMEA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CMEA에 의한 자체평가는 30년동안 CMEA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적 통합(integration)을 이루하여 커다란 성취를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매어리(Marer, 1981)는 CMEA가 東歐各國의 대소련 의존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1. CMEA의 자체평가

CMEA 報告書(1983)에 의하면 CMEA의 인구는 총 440백만명(소련이 265백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총소득은 전세계소득의 25%이상(1950년에는 15%)을 점유한다. (<표 1> 참조) 그리고 그들의 공업생산점유율은 1950년에는 전세계의 18%에 불과하였으나 노동생산성과 고정자산의 꾸준한 증가(<표 2> 참조)로 1980년에 이르러 $\frac{1}{3}$ 의 수준(소련이 20%)에 도달하고 있다.

<표 1> CMEA 가맹국의 인구 및 경제성장지수

국 가	연간평균인구(1,000명)		1980(1960년 : 100)	
	1960	1980	연간평균인구	국민소득규모
불가리아	7,868	8,862	113	412
헝가리	9,984	10,712	107	276
베트남	—	52,462*	—	—
동독	17,241	16,737	97	243
큐마	7,027	9,780	139	—
몽고	952	1,663	175	236
폴란드	29,561	35,578	120	307
루마니아	18,407	22,201	121	541
소련	214,329	265,542	124	323
체코	13,654	15,312	112	241

* 1979년

** 7월 1일 현재

자료 : CMEA(1983)

〈표 2〉 CMEA 가맹국의 노동생산성 및 고정자산 증가지수
(1960년도 : 100)

국 가	노동생산성		고정자산	
	1970	1980	1970	1980
불가리아	210	411	221	465
헝가리	142	237	153	271
동독	155	238	144	220
몽고	152	221	265	621
폴란드	153	249	148	268
루마니아	223	526	209	512
소련	186	271	215	437
체코	140	206	147	250

자료 : CMEA(1983)

또한 CMEA 보고서는 이와같은 CMEA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실업과 인플레, 노동자계층의 실질소득감소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의 CMEA 국가들에 이미 선진서방국가들이 향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기본적 음식류 및 내구재의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고용이 보장되고, 모든 수준에서의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의료제도 및 기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명한다. 가령 1980년도의 통계를 보면 인구 10,000명당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는 불가리아 98명, 헝가리 95명, 큐바 155명, 몽고 140명 및 체코 128명이었다. 또한 인구 10,000명당 의사의 수는 큐바의 경우 1965년에 불과 9.5명이었으나 현재는 19.4명으로 늘어났고 불가리아는 현재 30명, 폴란드는 24명이라고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CMEA 보고서는 가맹국제들간에 밀접한 경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가맹국들의 수입수요를 대부분 가맹국들로부터의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198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기계·장비·원유·철광석은 68~70%가 자체공급되며 석탄·목재의 경우는 94~95%가, 소비재의 경우에는 60%가 자체공급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CMEA 국가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위기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은 이들 국가간의 “단결력과 우의에 입각한 협력관계” 덕분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례로 CMEA 국가간의 국제분업과 공동생산 활동을 들고 있다. 동보고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당시 세계경제적 상황과 CMEA 국가들 간의 국제분업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범위의 제품 생산에 주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가령 1960년대 중반에는 동독과 체코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기계·장비의 70~80%를, 그리고 평가는 50~60%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난치게 넓은 상품 생산 영역을 영위하다 보니까 생산상 적정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산비용의 절감과 기술기준의 현대화에 문제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CMEA 국가 상호간에 국제분업과 공동생산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가령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특수 품목의 경우 상호간의 무역 규모가 1971년의 1,300백만 루블에서 1980년에는 9,000백만 루블로 확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CMEA 보고서는 가맹국들이 공업 생산(<표 3> 참조)과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가맹국들의 무역 상품구조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령 불가리아의 경우 1950년에는 엔지니어링 제품의 수출이 全無하였으나 1960년에는 전체 수출 상품의 12.9%를, 그리고 현재는 4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종전까지 농업 국가이던 불가리아

<표 3> CMEA 가맹국들의 총 산업 생산 증가지수
(1960년도 : 100)

국 가	총 산업 생산		생산재 생산		소비재 생산	
	1970	1980	1970	1980	1970	1980
불가리아	293	602	339	775	251	445
헝가리	194	313	195	312	204	344
베트남	—	125**	—	—	—	—
동독	181	315	193	343	159	260
큐바*	100	180	—	—	—	—
몽고	256	594	261	671	251	512
폴란드	223	461	250	516	109	390
루마니아	334	969	382	1,200	260	637
소련	227	404	239	438	203	336
체코	179	310	179	310	168	274

* 1970년 대 : 100

** 1975년도를 기준년도로 한 경우의 1979년도 통계

자료 : CMEA(1983)

는 CMEA가맹국들의 우의에 힘입어 아주 짧은 기간동안 전자제품, 컴퓨터 및 기타 고도기술제품의 생산기법을 배웠고 평가했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가를 따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보고서는 CMEA 국가간에 각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균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1950~1980년의 기간동안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았을 때 가장 부유한 가맹국과 가장 가난한 가맹국의 소득격차가 3.1에서 1.5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기간동안 공업생산의 격차는 4.9에서 1.6으로, 농업생산성의 격차는 그에서 1.5로, 소비자금의 격차는 3.2에서 1.6으로 줄었다고 주장한다. 동보고서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와 같이 공업생산의 기초가 새롭게 개발되었던 국가들이 이제 현대적 농업생산구조를 가진 공업국가로 성장하였고 몽고, 큐바, 베트남도 이러한 경제개발양상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동보고서는 CMEA를 통한 사회주의경제권의 통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자체평가를 수록하고 있다. 1971년 7월 제25차 CMEA 회의에서는 「CMEA 가맹국간의 사회주의 경제통합을 위한 협조체제의 확대 및 개선통합을 위한 협조체제의 확대 및 개선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밑에서 공업, 농업, 수송, 무역, 통화 및 금융분야에 걸쳐 약 200개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추진되었다. 산업생산면에서 협조체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채택된 조치들은 연료, 원자재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조치, 국제분업과 공동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및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로 세분될 수 있다.

CMEA 보고서는 이와같은 제반 경제통합조치들이 가맹국들의 自意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초국가적 기관의 수립이나 그들의 주권에 대한 침해없이, 또한 각국의 국내경제체계와 금융비용 계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었다고 한다. 동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점이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중심이 자본주의체제의 경제통합과 다른 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현재 120개 이상의 多國間協定 및 600개 이상의 兩國間協定에 의해 국제분업과 공동생산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분업은 엔지니어링상품에 국한하더라도 10,000가지 이상의 경우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주로 소련의 기술적 도움으로 이루어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다. 또한 금속가공, 공작기계(특

히 수치제어시스템개발), 주조·가입설비와 자동생산시설 등이 다국간의 공동생산과 분업이 달성된 대표적인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CMEA 보고서는 국제무역, 통화 및 금융관계에서도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가맹국간의 교역증대에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自讚하고 있다.

1971년 CMEA 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동「프로그램」은 가맹국가들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협조체제, 특히 조화를 이루는 전체계획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계획과정에서 다음의 다섯가지 면에서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 ① 경제, 과학기술의 중심적인 분야에서의 예측치 작성
- ② 각국 경제의 주요 부문의 장기계획 및 생산유형에 따라 협조
- ③ 각국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들의 전개
- ④ 조별산업 및 생산유형에 따라 이해당사국간의 공동계획성안
- ⑤ 계획체제 및 경제운용에 관한 각국 경험의 교환

이와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CMEA 가맹국들은 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원자재, 노동력 및 재원을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1975년 제29차 CMEA 회의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제1차 「다국간 경제통합조치를 위한 협동계획」(Concerted Plan of Multilateral Integration Measures)이 성안되었다. 동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2,677km에 달하는 “소유즈(Soyuz)” 가스파이프라인, “우스트-일림”(Ust-Ilim)의 펠프·제지공장, 연산 500,000톤 규모의 “키엠바이”(Kiembai) 아스베스트 광산건설 등이며 이와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가맹국들은 총 9,000백만루블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 대립되는 평가

CMEA의 자체평가와는 달리 메어러는 CMEA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며 사회주의 경제권의 통합화가 이루어져 왔다기 보다도 소련의 경제지배(economic domination)가 강화되어 왔다고 본다. 먼저 소련과 동구의 전후 경제성장을 짐작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련은 2차대전 직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연평균 6%의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각각 5%, 3.6%의 평균성장을 기록,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왔으며 최초의 통계(Verlag Weltarchiv GmbH,

1986: Table 1)를 보면 1980~85년의 기간 동안에도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3.1%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성장둔화의 주된 요인은 자본·노동 등 요소투입의 둔화와 경직한 경제체제로부터 누적된 효율성의 상실, 즉 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침체된 데 있다.

물론 무역면에서는 에너지가격상승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표 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의 對 CMEA 및 對西方貿易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CMEA보고서의 평가와는 달리 소련의 對西方貿易增加率이 對CMEA 貿易增加率을 능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소련이 대외채무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西方으로부터의 수입을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地金價格의 상승 및 OPEC 각국에 대한 무기수출의 증대가 그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표 4〉 소련의 수출입 평균증가율

	1960~70 ¹⁾	1970~78 ¹⁾	1979~83 ²⁾
수 출			
C M E A	8.9 %	6.9 %	12.2 %
西 方	10.5 %	11.1 %	16.3 %
수 입			
C M E A	6.2 %	8.1 %	10.2 %
西 方	9.3 %	12.7 %	14.1 %

자료 1) Marer(1981: 75)

2) WIIW(1984)

〈표 5〉 CMEA각국의 순대외채무 (단위: 10억 달러)

	1970	1976	1983
불 가 리 아	0.7	2.8	1.5
체 코	0.6	1.4	3.0
동 독	1.4	5.0	9.3
풀 란 드	1.1	11.3	25.0
루 마 니 아	1.6	2.5	8.0
헝 가 리	0.6	2.7	6.2
동 구 6 국 합 계	6.0	25.7	53.0
소 련	1.0	10.0	7.9
C M E A 은 행	n.a	3.5	3.6
C M E A 총 합 계	7.0	39.2	64.5

자료: Höhmann(1986: 22)

이와같은 소련의 연료 및 기타 원자재수출의 증대는 결국 東歐諸國의 경제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강화시키게 되었고, 후술하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동구경제의 회생으로 가능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6~83년의 기간동안 東歐6國의 순대외채무는 25.7십억 달러에서 53.0십억 달러로 두배이상 증가하였는데 반해 소련의 순대외채무는 10.0십억 달러에서 7.9십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편 東歐6國의 경제력과 경제성장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경제력을 <표 6>를 통하여 비교해보면 폴란드, 동독, 체코의 순위임을 알 수 있다. 1978년 현재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東歐6國의 GNP는 약 400십억 달러로 추계되는데 이는 프랑스나 중공의 GNP 규모와 맞먹고 소련의 GNP의 약 절반가량으로 추산된다. 메어러가 지적하고 있는데로 GNP의 추계에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CMEA의 소득이 전세계소득의 25%이상을 점유한다는 CMEA보고서의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東歐6國은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메어러는 동독과 체코는 1978년 현재 1인당 GNP가 4,500~5,500달러 수준(영국수준)이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3,000~3,500달러 수준(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수준)이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유고슬라비아는 2,400~3,000달러 수준(베네수엘라, 홍콩수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 1986: Table 1)은 헝가리와 폴란드 두 나라의 1984년도 1인당 GNP만 추계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헝가리와 폴란드의 1인당 GNP를 2,100달러로 추계하였다. 이는 한국(2,100달러), 유고슬라비아(2,120달러) 및 아르헨티나(2,23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6> 동구각국의 GNP추계(1978) (단위: 십억 달러)

	Alton	World Bank
폴란드	110	128
동독	80	96
체코	70	71
유고슬라비아	n.a	52
루마니아	69	38
헝가리	33	37
불가리아	24	28

자료: Marer(1981: Chart 1)

〈표 7〉 동구각국의 실질경제성장을

(단위 : %)

	1965~1970		1970~1975		1976~1979		1965~ 1984 ³⁾
	NMP ¹⁾	GNP ²⁾	NMP	GNP	NMP	GNP	GNP
폴 란 드	5.2	3.0	9.0	5.	2.4	1.8	1.5
동 독	5.2	3.2	5.7	3.8	4.3	2.8	n. a
체 코	6.5	3.2	5.0	2.7	2.9	1.3	n. a
유 고 슬 라 비 아	4.8	n. a	4.9	n. a	5.5	n. a	4.3
루 마 니 아	6.2	3.2	10.1	5.2	7.5	5.7	n. a
헝 가 리	6.4	2.7	6.0	3.0	3.7	2.2	6.2
불 가 리 아	7.8	4.0	7.2	3.9	5.9	1.8	n. a

주 : 1) Net Material Product, Mater(1981)

2) Gross National Product, Marer(1981)

3) World Bank(1986)의 추계

자료 : Marer(1981 : Chart 2) 및 World Bank(1986)

한편 東歐各國의 경제성장을 〈표 7〉을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실질경제성장률의 지표로는 東歐各國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산업생산(GNP)과 서방측의 GNP추계가 사용될 수 있는데, 어느 지표를 사용하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경제성장률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1965~84년의 기간중 자본주의경제권의 중상위소득그룹(Uppermiddle-income group)의 경제성장률은 3.3%이며 같은 기간중 일부동구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폴란드 1.5%, 헝가리 6.2% 및 유고슬라비아 4.3%이다. 즉 경제성장의 실적면에서도 가장 큰 나라의 하나인 폴란드는 아주 저조하며 이는 CMEA보고서의 평가와 배치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여러 제도를 부분적으로 실현해 온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이 동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CMEA자체의 평가에 배치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의 하나는 이미 〈표 5〉에서 제시된 바 있는 CMEA각국의 순대외채무이다. 硬貨(hard currency)로 표시된 순대외채무가 누적된 주요 원인은 주로 서구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반영된 때문이다. 1970년에는 거의 같은 수준에서 출발한 동구각국이 1983년에는 폴란드가 250억 달러의 순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폴란드 경제규모의 2/3에 달하는 체코의 경우 불과 30억 달러의 순채무를 지고 있다. 이는 CMEA보고서가 주장한 경제발전의 동질화경향을 요약하는 자료가 되며 동구각국의 국제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MEA가 과연 사회주의 경제권의 동질화경향을 가속시켜 진실된 의미의 통합(integration)을 가져왔는가 아니면 소련의 지배(domination)를 강화시켜왔는가를 논의하기로 하자. 소련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은 소련의 東歐諸國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합작투자등을 통해 그들의 경제발전을 도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Pecsi(1981)가 지적한대로 동구제국이 소련이 수출하는 제품은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비율이 높은 반면 동구제국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그들의 수출상품에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소련이 무역을 통해 東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폐차이는 동구제국의 대소련수출품목에는 서방으로부터 구입한 부품 및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마치 동구국가들이 서구제품을 소련에 “통과공급”(transshipment)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소련이 주장하는 보조금은 이와 같은 통화공급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경제가 통합화의 과정을 밟아왔다는 CMEA의 자체평가와는 달리 일방적 지배-피지배의 관계, 즉 종속적 구조가 심화되어 왔음을 무역구조, 교역조전의 변화 및 자본이동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면밀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Ⅲ. 무역구조상의 종속성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외국무역의 중요성은 자본주의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CMEA는 각국의 국제분업에 기초하여 域內貿易의 증진에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CMEA내에서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파악하는 일차적 수단은 역시 가맹국간의 무역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1. CMEA의 자체평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CMEA보고서(1983)는 국제무역에 관해 다음과 같은 별도의 평가를 게재하고 있다.

CMEA가맹국들의 국제무역의 증가율은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각국의 국민소득 및 산업생산증가율을 능가하고 있고 이는 각국이 국제분업에 종전보다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8〉 CMEA의 무역증가율

	1980년 (10억 루블)	1980년 무역지수 (1970년=100)	년평균증가율(%) 1976~80년
총무역규모	224.0	384	11.8
CMEA역내무역 (베트남제외)	120.0	328	10.9
여타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	9.4	434	13.1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	68.6	477	11.7
개발도상국가와의 무역	26.0	494	16.6

자료 : CMEA(1983)

CMEA 각국간의 域內貿易은 최근 수년간 전체무역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맹국들은 기계·장비·원유·철광석 및 소비재의 수요를 대부분 CMEA가맹국간의 무역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 점은 협존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의 불안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제35차 CMEA회의(1981년 7월)는 CMEA 가맹국간의 협조를 달성하는데 소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소련은 광대한 경제적·기술적·과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CMEA가맹국들에 원료·원자력·기계·장비 및 기타제품을 공급하였고 선진기술을 제공하였다. 특히 소련의 국제시장은 대부분의 CMEA국가들에게 그들의 공산품 및 기타제품을 팔 수 있는 안정적 시장을 공여해 왔다.

CMEA가맹국의 각국별 域內貿易규모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CMEA각국은 외국무역을 국가독점체제로 운영하여 왔는

〈표 9〉 CMEA역내무역 (백만루블)

	1960	1970	1980
역내무역총액	14,338	33,493	119,989
불가리아	872	2,569	9,590
헝가리	1,037	2,670	10,303
동독	2,679	5,709	16,122
큐바	—	1,355	5,448
몽고	127	176	616
폴란드	1,437	4,067	63,119
루마니아	821	1,689	5,753
소련	5,343	12,284	45,777
체코	2,150	4,329	13,252

자료 : CMEA(1983)

데 결국 외국무역의 규모는 그들의 경제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며 외국기관과의 상업적 관계는 허가를 취득한 기관 또는 기업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CMEA는 역내무역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① 장기무역협정 및 상호공급에 관한 연도별 약정에 근거한 무역규모의 법적 규제

② 역내무역에 적용할 가격형성에 관한 일반원칙

③ 상품공급·기술제공 및 장비설치와 부품공급에 관한 일반조건

④ 경제협력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IBEC)을 통한 다국간결제제도

1968년에는 「CMEA 가맹국기관간의 상품인도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Terms for Deliveries of Goods between Organizations of the CMEA Member Countries)이 체결되었으며 이 일반협정이 가맹국간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법적 근간이 되어왔다.

가격조건은 1974년 이전까지 매 5개년계획기간중의 평균 세계시장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1973~1974년 중 원자재 및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가격설정방식이 변화될 수 밖에 없었다. 새로운 기준가격결정 방식은 당해년도 전 5년동안의 세계시장가격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같이 계약가격을 연간단위로 고정시키는 것은 각국의 경제계획추진과 역내무역의 안정적 증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치이다.

한편 CMEA역내무역의 상품별 구성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기계 및 장비수출이 1960년 31.7%, 1970년 37.7% 및 1980년 41.1%로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엔지니어링기술이 취약했던 가맹국들의 기계·장비 수출이 꾸준히 증대되어 온 것은 CMEA국간의 경제발전 수준이 균등화되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가령 불가리아의 경우 1950년에는 기계·장비의 수출이 거의 없었으나 1980년에는 CMEA가맹국들에만 총 3,600백만루블의 엔지니어링제품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총 수출의 54%를 점하는 것이었다.

CMEA각국간의 협력증대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통합화는 세계자본주의 경제가 갖는 위기현상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가맹국들의 경제성장을 안정화시켰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CMEA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및 개발도상국

과의 무역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 즉 CMEA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무역비중은 1960년에서 1980년동안 20.5%에서 30.6%로 증대하였고 대개발도상국의 무역비중도 같은 기간동안 6.9%에서 11.6%로 증대하였다.

특히 1981년 7월에 있었던 제35차 CMEA회의는 非差別 原則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기술 관계의 증대를 결의한 바 있다. 소련은 중심으로 한 CMEA국가들은 서방세계에 대해 천연가스·목재 및 제지·비철 금속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기계·장비·기술제품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서방제품수요는 서구제국에 대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1970년대 중반에는 서독노동자의 30만명이 대사회주의국

〈표 10〉 소련의 對東歐 6國 輸出(1960~1982) (단위 : 백만루블)

년도	연 료	월자재 및 중간재	농업·식품	기 계	공 산 품	합 계
1960	372	1,205	476	637	77	2,767
1961	438	1,335	424	784	80	3,060
1962	527	1,438	544	976	89	3,574
1963	598	1,482	504	1,081	83	3,747
1964	668	1,717	322	1,274	68	4,049
1965	679	1,758	340	1,241	79	4,097
1966	660	1,777	380	1,327	79	4,223
1967	682	1,836	485	1,442	91	4,535
1968	742	2,048	493	1,671	118	5,073
1969	846	2,228	559	1,826	119	5,578
1970	914	2,600	487	1,944	138	6,083
1971	1,051	2,653	576	2,090	147	6,517
1972	1,171	2,743	351	2,301	161	6,727
1973	1,298	2,875	347	2,682	179	7,381
1974	1,565	3,197	496	3,185	263	8,705
1975	3,126	4,356	455	3,581	347	11,866
1976	3,707	4,620	177	4,216	387	13,107
1977	4,676	4,895	326	4,982	388	15,266
1978	5,641	5,127	112	5,638	427	16,946
1979	6,965	6,279	434	4,169	670	18,517
1980	8,406	6,843	289	4,343	643	20,524
1981	11,503	8,584	407	4,262	422	25,178
1982	13,394	—	—	4,029	396	20,669

자료 : 1960~1978은 Marer(1981)에 인용된 소련의 공식통계자료
1979~1982 WIIW(1984)

가와의 무역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2. 소련의 對東歐貿易構造

이상과 같은 CMEA보고서의 자체평가는 CMEA의 域內貿易의 증대만을 강조할 뿐 무역구조의 진실된 측면을 드러내 놓지 않고 있다. CMEA국가들 중에서도 쿠바·동고·베트남 등의 무역은 무역외적 고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교역량도 전체 CMEA교역량의 10%미만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소련의 對東歐 6國의 무역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련의 對東歐 6國의 무역현황을 1960~1982년의 기간동안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련의 對東歐 6國輸出은 1960~1982년의 기간동안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연료와 원자

〈표 11〉 소련의 對東歐 6國 輸入(1960~1982) (단위 : 백만루블)

년 도	연 료	원자재 및 중 간 재	농업·식 품	기 계	공 산 품	합 계
1960	187	535	171	1,153	470	2,516
1961	173	586	247	1,198	536	2,740
1962	164	627	229	1,551	660	3,231
1963	164	680	267	1,806	816	3,732
1964	158	757	289	2,006	801	4,005
1965	171	741	366	2,113	815	4,205
1966	158	662	349	1,926	922	4,016
1967	159	733	400	2,175	1,117	4,583
1968	145	802	417	2,471	1,245	5,079
1969	148	865	475	2,645	1,278	5,410
1970	144	962	555	2,899	1,411	5,970
1971	174	1,001	639	3,048	1,671	6,533
1972	205	1,202	759	3,720	1,801	7,687
1973	211	1,152	728	4,214	1,788	8,093
1974	196	1,208	889	4,450	1,857	8,600
1975	418	1,630	1,317	5,616	2,330	11,312
1976	407	1,798	1,226	6,321	2,474	12,226
1977	411	1,981	1,358	7,331	2,771	13,852
1978	497	1,978	1,233	9,985	3,083	16,776
1979	354	1,657	1,476	9,408	3,199	16,094
1980	294	1,820	1,700	9,897	3,449	17,160
1981	228	2,315	2,256	12,153	3,901	20,853
1982	52	—	—	12,823	5,508	21,273

자료 : 〈표 10〉과 동일

재 및 중간재이다. 〈표 10〉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 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는 57%였으나 1981년에는 78%로 증가하였다. 이는 1970년대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과 두 차례의 원유가격 상승이 무역구조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련의 對東歐 6國 輸入構造를 〈표 11〉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輸入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기계 및 소비재 공산품으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64.6%에서 1980년에는 86%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소련의 對東歐貿易은 원료·중간재의 공급과 공산품의 수입으로 특징지울 수가 있다. 또 이러한 패턴은 東歐의 소련에 한한 貿易을 통한 經濟從屬이 강화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소련의 對東歐 6國 貿易收支를 계산하면

〈표 12〉 소련의 對東歐 6國 貿易收支(1960~1982)(단위 : 백만루블)

년 도	연 료	원자재 및 중 간 재	농업·식 품	기 계	공 산 품	합 계
1960	185	670	305	-516	-393	
1961	265	749	177	-414	-456	
1962	363	811	315	-575	-571	
1963	434	802	237	-725	-733	
1964	510	960	33	-727	-733	
1965	508	1,017	-26	-872	-736	
1966	502	1,115	31	-599	-843	
1967	523	1,103	85	-733	-1,026	
1968	597	1,246	76	-800	-1,127	
1969	698	1,363	84	-819	-1,159	
1970	770	1,638	-68	-955	-1,273	
1971	877	1,652	-63	-958	-1,524	
1972	966	1,541	-408	-1,419	-1,640	
1973	1,087	1,723	-381	-1,532	-1,609	
1974	1,369	1,989	-393	-1,265	-1,594	
1975	2,708	2,726	-862	-2,035	-1,982	
1976	3,300	2,822	-1,049	-2,105	-2,087	
1977	4,265	2,914	-1,032	-2,349	-2,383	
1978	5,144	3,149	-1,121	-4,347	-2,656	
1979	6,611	4,622	-1,042	-5,239	-2,529	
1980	8,112	5,023	-1,411	-5,554	-2,806	
1981	11,275	6,269	-1,849	-7,891	-3,479	
1982	13,342	—	—	-8,794	-5,112	

자료 : 〈표 10〉과 〈표 11〉로부터 계산

〈표 12〉와 같다. 소련의 對東歐貿易收支는 1974년 제 1 차 오일파동이후 계속적으로 흑자를 누적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유가파동은 東歐諸國의 對蘇依存度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들의 對蘇貿易收支赤字의 누적은 경제개발계획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IV. 교역구조의 변화와 종속의 심화

CMEA가 사회주의 경제권의 통합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의 하나는 각국간의 무역에 어떠한 가격결정원리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의 가격이 형성되고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에 의해 최종적인 교역조건이 결정된다. 그러나 CMEA가 표명해 온 사회주의 경제권의 통합은 그 일차적인 목표가 무역의 확대보다는 안정적 무역구조의 운영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권내에서의 원활한 제품수급구조의 달성을 있었다. 따라서 계획결제를 추진해 온 CMEA에서 수시로 세계시장가격에 의해 변동되는 가격체계별에서 국제무역을 운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CMEA역내국간의 무역에 대해 적용할 가격의 결정원리는 각국의 교역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설정된 교역조건은 각국의 계획경제추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소련과 東歐 6國間의 교역조건의 추이는 경제적 종속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교역조건의 추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CMEA역내 무역에 적용되는 가격의 결정원리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CMEA국가간에 무역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보통 4단계에 걸쳐 가격이 형성된다. 제일 처음 고려하는 가격은 기초가격(basis price)이며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설정하는 데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 선정한 구체적인 세계시장 가격이다. 기준가격이란 거래당사국이 서로 합의한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형성된 세계시장 가격의 평균을 말한다. 기준가격은 다국간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계약가격(contract price)이라고 하는데 실제무역거래상의 신용장가격을 말한다. 이와같은 가격결정 단계에서의 구분이외에도 거래의 상대, 경제통화의 종류 및 세계시장가격의

식별가능여부 등에 따라 동일한 수출상품에 대해 서로 상이한 가격이 적용되어 왔다.

CMEA각국은 1974년까지 기준가격으로 5년간의 세계시장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흔히 '부카레스트 방식' (Bucharest formula)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1974년 제1차 오일파동을 계기로 1975년에는 그 이전 3년동안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모스크바 방식(Moscow formula)으로 알려진 5년간의 연동평균가격제(Sliding price formula)를 사용하고 있다. 즉 매년의 적용한 기준가격으로 가장 최근 5년간의 세계시장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같은 가격결정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소련과 東歐 6國間 貿易去來에서의 교역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련의 무역통계는 사회주의국가, CMEA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일부) 및 비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별로 소련의 수출입증가에 대한 연도별 지수의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소련의 對東歐 6國의 무역거래가 전체 CMEA 무역거래의 90%를 차지하므로 소련의 對 CMEA교역조건을 對東歐 6國의 교역조건으로 해석해도 큰 오차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3>에 제시된 것은 1970~82년의 기간동안 소련의 對東歐 交易條件의 변화를 디에츠(Dietz, 1984)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동기간동안 소련의 교역조건은 꾸준히 상승하여 약 50%정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소련의 非社會主義圈과의 교역조건은 심하게 변동되어 움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非社會主義圈 交貿條件은 OPEC의 첫번째 가격인상을 전후하여 상승한 후 급속도로 하락하였다가 당시 상승해 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OPEC의 가격인상이 있은 직후 수년동안에만 소련의 對 CMEA 交貿條件이 對非社會主義圈 交易條件를 뒤따라 움직여 움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두 개의 경제권에 대한 소련의 교역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이를 근거로 소련의 對東歐交易의 得失을 판별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 첫번째 이유는 이들 두 경제권에 대한 소련 무역의 상품구성이 상호비교를 허용할 만큼 유사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엄격의 무기제공등 보조적 성격을 띤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對開發途上國 交易條件 그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西歐諸國과의 교역에서도 수입가격(특히

농산물)의 변동인 소련의 공식통계를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디에츠(1984)는 소련의 對CMEA交易條件이 1974~82년의 기간동안 42%정도 개선된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소련의 공식추계치인 47%에 거의 근접하는 값이다. 디에츠(1944)의 추계에 의하면 소련의 1982년 현재 각국별 교역조건은 1974년을 기준(1.00)으로 할때 불가리아 1.44, 체코슬로바키아 1.56, 동독 1.47, 헝가리 1.47, 폴란드 1.20, 루마니아 1.25 및 6국 평균 1.42이다. 디에츠(1986)는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소련의 對東歐 6國 交易條件이 1984년에는 1.365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한편 CMEA 域內價格과 세계시장가격은 품목에 따라 상당한 乖離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우쉬(Ausch, 1972)는 1960년도의 상대가격(CMEA역내가격/세계시장가격)을 기계장비 1.39, 산업용 소비재 1.25, 식품 및 그 원료 1.00 및 연료 1.20로 추계한 바 있다. 그러나 마레스·바노스(Marrese & Vanous, 1983)는 1960년도의 기계장비 상대가격은 2.60으로 추계하고 있고, 1978년도에는 기계장비 2.17, 산업용 소비재 1.89, 식품 및 그 원료 1.19, 및 연료(0.93)로 추계하였다. 이러한 추계치들로부터 우리는 CMEA 域內價格體系가 기계장비 및 소비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연료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디에츠(1984)는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CMEA 역내가격이 평균 1.5배 내지 2.5배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CMEA 국가들이 농산품 원료의 對西方輸出보다는 공산품의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대가격체계의 왜곡을 두고 흔히 소련이 동구 제국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즉 소련이 주요 원료 및 연료를 동구에 수출하고 대신 공산품을 수입해 왔던 무역패턴을 고려할 때 이는 소련에 불리한 가격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첫째, CMEA가 즉각적으로 세계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가설은 그 자체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CMEA각국이 세계시장에서의 거래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소련과의 교역에서도 소련의 풍부한 자연자원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공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결국 소련에서 제조된 공산품가격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소련에 불리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격구조보다 무역패턴 그 자체에 있고,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권을 통합하려는 소련의 의지에 수반되는 일종의 거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논의를 둘러싸고 소련의 對東歐補助額 또는 機會收益(forgone income)을 측정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소련의 보조액 또는 기회수익은 두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술한 왜곡된 상대 가격체계로부터 유발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시장가격을 즉각 반영시키는 대신 시차를 두고 반영시키는 CMEA역내 가격책정방식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만일 소련이 세계시장가격으로 東歐 6國과 교역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소위 기회교역조건(opportunity terms of trade)을 산정할 수 있다. 마레스, 바노스(Marrese, M. and J. Vanous, 1983)가 산정한 바에 의하면 1972~78년의 기간 동안 소련의 교역조건은 72.8% 개선되었어야 하며 그 결과 상실된 기회손익은 총 29,154백만루블에 달한다고 한다. 디에흐(1984)는 동기간동안 기회교역 조건의 향상이 34.3%에 불과하고 생산된 기회수익의 규모도 9,869백만루블로 하향 추계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실로 판단된다. 첫째, 총체적인 교역조건의 변화추이는 소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東歐各國의 對蘇依存度는 심화되어 왔다. 둘째, 왜곡된 상대가격체계는 소련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격체계가 아니라 소련과 東歐 6國間의 자원배분, 기술수준 및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째, 소련의 對東歐補助金 또는 상실된 기회수익은 CMEA를 경제블럭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CMEA역내 가격과 세계시장 가격 간의 가격차에 기인한다고 해석하는 것 보다 그러한 가격차별을 파생시키는 CMEA라는 특수한 경제블럭의 사회경제적 속성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MEA 보고서가 주장하는 소련의 일방적인 경제적 희생, 또는 양보에 의한 CMEA 경제권의 통합화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東歐 6國의 주된 수출품인 기계장비등의 가격이 세계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왔다는 것은 소련의 보조금공여의 결과라기 보다 사회주의 경제권으로의 폐쇄적 통합에 따른 전세계적 비교우위의 상실, 즉 기회비용의 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교역조건을 통하여 東歐의 경제구조가 對蘇從屬性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두차례의 오일파동은 종속성을 촉진시킨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V. 자본이동을 통한 종속성의 강화

국민경제의 종속관계를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자본이동이다. CMEA가 사회주의경제권을 표방한 이상 자본주의경제권에서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상응하는 자본이동의 규모나 범위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CMEA내에서도 자본이동이 존재해 왔으며 자본이동의 결과 소련영토내에서 자본의 국제적 집중화 현상이 이루어져 東歐의 對蘇經濟從屬을 深化시켰음을 발견 할 수 있다.

1. 자본이동의 평가

그라지아니(Graziani, 1986)는 CMEA내에서의 자본이동을 화폐단위로만 파악하면 자본이동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서방세계의 연구자들의 CMEA내에서는 자본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반박하고 있는데 CMEA내의 자본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각국통화와 공식결제수단인 루블(transferable ruble)도 兑換性이 없으며 信用供與는 상품에 의해 커버될 때만 가능하다. 가령 달러貨나 金表示로 信用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西歐의 特定製品의 구매에 연결되어 공여되므로 이와같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즉 CMEA내에서의 제도자체가 화폐적 자본투자가 크게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② 서구자본주의사회에서 존재하는 자산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같은 대체적 투자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CMEA내에서는 주식시장이나 어음할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私的이던 公的이던 直接資本投資가 없다. 그 이유는 일부의 共同投資政策은 제외하고는 CMEA의 특정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CMEA내에서는 자본투자의 신용공여는 기계장비의 판매를 통하여 생

성된 주로 정부간의 신용거래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벨리아에프(Beliaev, 1973)는 “신용거래는 본질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상업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보토스(Botos, 1976)도 사회주의경제권내에서의 신용거래는 항상 상품에 대한 신용거래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는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먼저 당사국간의 상품인도협정에 대한 조인이 이루어진 후 신용의 형태나 수단에 대한 협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지아니는 자본수출이 단순히 저개발국가들로부터 잉여를 수출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무역의 흐름을 강화시키고 국제간의 의존체계를 강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볼 때 CMEA내에서는 이러한 면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CMEA의 자본이동이 서방세계에서는 자본이동과 상이한 가장 특정적인 점은 비정치적인 신용공여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원자재 생산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즉 이와같은 비정치적인 신용공여도 미시경제단위의 이윤이라든가 국내자본에의 한 투자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익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⑤ 이와같은 질적・구조적 차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자본의 총규모는 서방세계에 비해 월등히 작다고 볼 수 있다. 東歐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이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형가리 경제학자들은 투자가들이 신용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잃게되는 주된 이유로 낮은 이자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는 것은 합작투자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원자재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투하된 부문에서의 자원의 사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雙務主義(bilateralism), 통화의 非兌換性(nonconvertibility) 및 多岐化된 價格構造 등이 자본이동의 규모를 제한하는 요인들로 지적되었다.

⑥ 보통 서방제국에서의 자본이동을 보면 자본이 풍부한 나라, 즉 자본수익률이 낮은 나라로부터 자본이 부족한, 즉 자본수익률이 높은 나라로 움직인다. 먼저 자본수익률의 측면에서 CMEA내의 자본이동을 고찰해 보면 그들은 국민경제전체에 도움이 되는 국내투자의 연장으로서 해외투자를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시하는 단기적 자본의 회수 및 이윤가능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자본이동이 크게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부족국보다는 자본잉여국의 경우에 자본이동상의 많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본의 순수출국가

들은 처음부터 높은 자본축적율을 갖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불가리아같은 나라들은 자본수입국가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사정은 反轉되었다. 물론 아직도 소련이 상대적으로는 가장 큰 자본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소련을 제외한 CMEA각국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에서의 소련자본의 지분이 소련영토내 프로젝트에서의 CMEA각국의 지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소련으로 자본이전을 시작했다는 것은 소련영토에의 자본집중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항상 東歐諸國들이 자본부족에 시달려 오게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모든 CMEA국가들이 자본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자본배분상의 결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자본이동의 형태

이 차대전후 CMEA경제권내에서의 자본이전은 대체로 전쟁배상(war separations), 혼합기업(mixed corporation), 신용공여(credit) 및 합작투자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西方側의 추계에 의하면 1945~60년사이의 기간동안 소련의 東歐支配로 말미암아 적어도 190억 달러 상당의 東歐資源이 소련으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1) 전쟁배상

먼저 전쟁배상금을 보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커던 동독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추계치에는 전쟁장비, 공산품, 농산품, 수송장비 및 기타 병원·대학교의 기구 등 소련군에 의해 이송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전쟁배상에는 두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소련에 의한 공식적인 공장철거 및 산업장비의 이송이며 또다른 형태는 상품 및 재고품의 이송이다. 헝가리도 생산물의 이송이라는 형태로 전쟁배상을 강요당했으며 가령 전쟁중에 발생한 對蘇債務는 상환해야 하는 반면 對獨債權은 상실하고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헝가리는 우라늄을 일종의 전쟁배상의 형태로 헐값에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루마니아도 원유·곡물 등을 팔아 소련영토로부터 취득한 장비 및 전쟁기간중 루마니아군대가 소비한 전략물자에 대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불가리아의 경우는 가장 후진된 지역의 하나였으므로 일차상품을 수출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공식적인 전쟁배상을 지불할 것이 없었으며

이와같은 소련당국의 “施惠”가 두 나라간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도왔다고 평가된다. (Graziani : 20-21)

폴란드의 경우는 종전에 독일의 영토였으나 전쟁으로 폴란드로 편입된 지역에서의 산업시설 및 물자의 수용과 독일의 대폴란드 전쟁배상액(전체배상액의 15%)이 소련을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배상액을 지불한 셈이다. 폴란드는 이러한 소련의 조치에 대한 댓가로 전쟁배상의 전기간동안,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량의 석탄을 소련에 제공하였다.

이와같은 전쟁배상의 지불은 이들 東歐各國의 경제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전쟁배상금의 지불은 결국 이들 나라들의 자본소득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스토퍼(Stolper, 1960)와 쾰러(Köhler, 1965)에 의하면 공식적인 자본감축의 규모가 전후 독일의 총산업자본의 1/4에 가깝다고 하며 총전쟁배상금은 전후 8년동안 GNP총액의 1/5 내지 1/3에 해당한다고 한다. 헝가리의 경우에도 1946, 1947 및 1948년의 전쟁배상액이 전체국민소득의 17%, 10% 및 7%에 각각 도달한다고 추계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1944~48년의 기간동안 지급한 전쟁배상금이 동기간중의 루마니아 국민소득의 84%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이와같은 과도한 전쟁배상금의 지불을 위해 수출증대가 필요하였고 시설 및 장비의 수입은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동독과 헝가리의 우라늄, 폴란드의 석탄, 헝가리의 보키싸이트, 루마니아의 원유 등은 당시 상대적으로 공급부족상태에 있던 세계시장에서 거래되었다면 훨씬 나은 조건으로 거래되어 귀중한 외화획득원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때로는 많은 액수의 전쟁배상이 대량의 농산물 수출로 충당되었는데 그 결과 동구제국은 자국의 소비를 회생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전쟁배상에 따른 대량의 거래결과, 많은 나라들은 금속가공, 화학, 기계 및 전기공업 등을 위주로 하는 중공업중심의 산업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소련의 경우에는 전쟁배상금수입이 자본축적에 기여하였으며 가령 1950년에는 독일로부터의 전쟁배상금수입이 전체 국민소득의 3%에 달할 정도였다. 이와같이 막대한 규모의 전쟁배상에 의한 자본이동은 東歐經濟의 초기의 자본부족과는 반대로 소련경제에는 자본축적의 기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CMEA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경제권이 편성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자본이동을 통한 종속구

조가 胚胎되고 있었던 것이다.

(2) 혼합기업

이 차대전 이후 1958년경까지 또 다른 형태의 자본이전이 이룩되었는데 이를 혼합기업(mixed corporation)이라고 한다. 혼합기업은 東歐의 일부기업들이 소련과 공동소유하에 있게 된 특수한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이는 나중에 언급할 합작투자기업(joint investments corporation)과 구분되는데 그 이유는 혼합기업의 경우 소련의 持分參與가 실질적인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쟁배상 또는 나찌재산의 이전점유로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라지아니는 이와같은 혼합기업의 형태가 소련이 동구경제권에 침투하고 이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한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루마니아의 경우 397개의 상공업체, 33개의 광업 및 석유업체 및 97개의 은행, 부동산회사들이 1945~52년의 기간중 16개의 혼합기업으로 합병되었으며 이들 혼합기업을 통해 소련의 루마니아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헝가리의 경우 이 차대전이후 311개업체가 소련의 직접소유로 넘어갔다. 또한 소련은 헝가리 국립은행(Hungarian National Bank)과 일반신용은행(General Hungarian Credit Bank)에 지분을 갖게되었고 1946년에는 수송·광업부분에서 헝가리-소련혼합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동독의 경우 소련에 이전되어야 했던 213개의 기초 및 금속가공업체들이 소위 SAG(Sowjetischen Aktien-Gesellschaften)라는 이름의 소련재산이 되었다. 동독경제에서의 SAG의 위치는 실로 막강하였는데 한때 동독총생산의 1/4내지는 1/3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SAG의 막대한 총생산중 1/3만이 동독에 남았고 그 나머지는 전쟁배상의 형태로 소련으로 공급되었다. 특히 1945~53년의 기간동안 SAG비스무트(Wismut)는 전략적으로 귀중한 우라늄생산을 시작하여 전량을 소련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과정에서 원래는 소련이 혼합기업에 당해국과 같은 규모의 자본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련은 나치의 자산을 인수하는 형태로 순자본의 추가적 지출이 없었던 반면 당해국들은 자본지출과 더불어 노동과 원자재의 공급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이와같은 혼합기업은 당해국들의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로 해체될 수 밖에 없었다. 1948년 소련은 불가리아에 상업·수송업체들을 백만불에 팔아

넘겼는데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무상으로 넘겨받았던 업체들이었다.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1953년 동독의거이후 소련은 당해국들에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련의 자본지분을 팔아넘겼다. 그리고 1956년의 폴란드 및 헝가리의거가 있은 이후 소련은 거의 모든 혼합기업에의 자본지분을 1950년대말까지 제공하기로 한 원조의 일부로 상각처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차대전후 약 10년간 전쟁배상이외에도 소련은 혼합기업을 통하여 이윤, 자산처분소득 및 유리한 가격에 의한 상품매입 등의 형태로 東歐의 資源을 착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르바트(Horvat)의 추정에 의하면 혼합기업으로 인한 각국의 회생이 동독, 헝가리 및 루마니아에 각각 200, 250 및 400백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소련의 순자본수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전쟁배상과는 별도로 발생한 東歐諸國의 경제적 손실인 것이다.

(3) 신용공여

신용공여(credits)는 CMEA내에서 사용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자본수출로 소련 뿐만 아니라 東歐 6國도 對蘇聯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소련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합작투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즉 소련의 對東歐 6國 信用供與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소련의 對東歐信用供與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군사비신용으로 그 숫자가 과장된 것 같은 인상을 갖게된다. 1945~1968년의 기간중 대체로 80억 내지 90억루블의 규모로 측정되며 1968~1974년의 기간동안에는 15억루블(20억 달러)정도로 측정된다. 가장 많은 액수의 신용공여를 받은 나라는 폴란드이며 그다음 동독, 불가리아, 헝가리 등이다. 체코와 루마니아는 가장 적은 액수의 신용공여를 받은 것을 나타나며,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폭동, 파업 등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신용공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소련을 제외한 東歐 6國間의 신용공여는 극히 제한된 규모로 파악되는데 1950~68년의 기간동안 CMEA내의 신용공여액의 1/5에 불과하였으며 이후로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개국중에서 체코가 가장 큰 신용공여국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의 對東歐信用供與는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소련산 원자재 및 식품구매를 위한 短期信用-주로 전후 및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1965년의 헝가리 및 1956, 1976 및 1980~81년의 폴란드의 경우에 공여된다.

② 金 또는 外換信用-1947~48년의 기간동안 전후복구를 위해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에 제공된 신용 및 각국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 이후 위에 언급한 폴란드, 동독(1953) 및 헝가리(1956~57년), 체코(1968~69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서방국가들로부터 기계장비 및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또는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돋기 위한 경우 등에 사용되었다.

③ 資本投資信用-주로 소련으로부터의 기계장비구입을 돋기 위해 제공된 신용으로 1950년대에 제공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용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이러한 신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특히 소련의 利害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문에 국한되었다. 예를들면 헝가리의 식품공장, 정유산업, 보 키사이트광산이라든가, 폴란드의 철강 및 금속산업, 루마니아의 석유화학 산업, 체코의 우라늄공장, 동독의 화학산업 및 불가리아의 비료, 정유 및 금속광산 등이다. 즉 에너지 및 중화학 공업부분이 투자신용공여의 주된 대상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두가지 형태의 신용공여가 전체사용의 약 절반가량을 점유하며 정치적·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형태의 신용공여가 증대되었다. 이는 곧 소련과 당해국간의 엄격한 쌍무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4)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CMEA내에서 2개국이상의 당사국들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제도로 자본이전이 수반되는 일종의 변형된 신용공여제도라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주로 체코와 동독이 다른 나라에서의 원자재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합작투자에 참여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東歐 6國도 소련에서의 원자재개발을 위한 합작투자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합작투자의 규모는 미미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이후 東歐諸國이 원자재공급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은 東歐 6國을 대상으로 소련의 원자재개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특히 소련동부지방에서의 원자재개발산업에 투여되는 투자의 비용이 점차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의 하나는 소련의 對東歐 6國交易條件이 불리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소련당국은 이들 東歐 6國에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 성격의 투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東歐 6國으로서는 각국의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1973년의 오일파동 이후에는 CMEA내의 거래가격이 세계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하였으므로 더욱더 소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1971~75년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합작투자의 규모는 60억 루블이었으며, 1976~80년의 기간에는 90억 루블로 증액되었다. 합작투자의 주대상은 소련의 에너지 및 원자재개발, 그리고 이들 제품을 東歐로 수송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일부 기초상품의 제조설비 등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 비용의 반정도를 소련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정도를 관련국들이 분담하지만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은 전부 소련이 갖고 있다.

<표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6~80년의 계획기간동안 대규모의 합작투자가 추진되었으며 거의 전부가 소련영토내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東歐 6國이 合作投資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면 대체로 세가지 형태를 갖는다. 그 첫번째 형태는 상품의 수출에 의한 자본참여이다. 즉 자본수입국(소련)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재, 자재, 송유관 또는 소비재 등을 요구하면 이를 상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자본참여를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렌부르그(Orenburg) 프로젝트나 쿠르스크(Kursk)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서구제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東歐 6國이 참여할 수 있는 합작투자의 두번째 형태는 금융자본의 형태이다. 이 경우 대부분 국제투자은행(International Investment Bank)이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가령 오렌부르그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투자은행은 타이프와 기타 장비를 서방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20억 달러 상당을 西歐의 金融市場으로부터 차입하였다. 소련은 동프로젝트의 지분인 반정도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반은 東歐 6國이 自國의 持分率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환하되 상환통화는 西歐通貨로 이자율도 西歐의 市場利子率이 적용된다.

〈표 13〉 CMEA의 주요합작투자(1976~1980 계획기간)

프로젝트	위치	일자		참가국	동구투자자들에 공급될 연간 물량
		계약 년도	완공 목표 년도		
펄프공장	소련 (우스트-일립· 시베리아)	1972	1980	체코를 제외한 모든 가맹국	205,000t
아스베스토 공장	소련 (지엠바에브, 우랄지역)	1973	1980	모든 가맹국	40,000~ 50,000t
천연 가스개발 및 대륙간 가스파이 프 건설	소련 (오렌부르크, 우랄지역)	1974	1980	모든 가맹국 (루마니아는 국 한된 역할)	15.5십억 Cubic metres
철광석 광산화장 및 부대시설	소련 (쿠르스크와 우크 라이나지역)	1974	1977~80	루마니아를 제외 한 모든 가맹국	5.29백만t
철광석 합금생산 을 위한 부대시설 (7개의 공장)	소련 (우크라이나와 카 자흐스탄지역)	1974	1979~80	모든 가맹국	n. a.
750-kv 전기 송배 전시설	소련(우크라이나) 와 헝가리	1974	1978	루마니아를 제외 한 모든 가맹국	3십억 kwh (추정)
니켈 및 코발트 생산시설	쿠바	1975	n. a.	모든 가맹국	n. a.

자료 : Hannigan and McMillan(1981)

資本進出의 세번째 형태는 노동, 기술 및 건설서비스의 직접 송출이다. 소유즈(Soiuz)프로젝트에는 각국으로부터 약 3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우스트-일립스크(Ust-Ilimsk) 프로젝트에는 수천명의 불가리아 인력이 송출되었다.

이와 같은 합작투자의 得失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라지아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東歐 6國이 얻게 된 혜택으로는 그들의 제품에 대한 장기적인 구매보장이다. 이러한 장기적 보장은 특히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두번째 이익은 그들 제품의 공급 대가를 얻게 되는 소련상품의 가격이 세계시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일부 서방전문가들은 오렌부르크 프로젝트에 투자한 東歐의 내부이익률은 가령 中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했어야만 하는 대체비용등을 감안할 때 19.5%~31.5%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외에도 합작투자에 수반되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지적되었다.

① 純非資本化(net decapitalization) : 많은 東歐學者들이 지적한대로 투자

가 소련영토내의 프로젝트에 집중됨에 따라 東歐諸國의 純資本輸出이 야기되고 國內投資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의 對西方輸出의 80%가 원자재이므로 시베리아의 자연자원개발은 소련 자체의 수출부문을 개발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② 지나치게 낮은 利子：지나치게 낮은 이율(2%)은 東歐의 유로시장 이자율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채무국(소련)에 대해 일종의 特惠가 제공되는 셈이다. 즉, 한 서방측주계에 의하면 그 결과 지게되는 채권국(東歐)의 비용은 5개년계획기간이 경과할 때 70%까지 증가된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東歐가 소련에 대해 일종의 강제적인 대부(forced loan)를 제공하는 셈이며 아주 낮은 利子率 때문에 信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하게 된다.

③ 信用의 감가상각：1975년 이후 에너지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소련이 東歐의 投資에 대해 맷가로 지불하는 에너지제품가격은 계속 증가해왔다. 이는 거꾸로 東歐의 投資가 급속히 감가상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④ 外換形態로의 信用：합작투자는 상당한 규모의 西方側 技術과 장비 및 信用을 필요로 하는데 西方側 通貨表示 信用은 외화보유가 부족한 東歐 6國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⑤ 기타 계산될 수 없는 부정적 측면, 결국 자본이동의 측면에서도 소련 중심의 경제종속이 강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자본투자가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계획경제학의 동구경제에 심대한 구조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VII.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소련과 東歐 6國간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경제권의 실체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사회주의 경제권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CMEA 자체의 주장과는 달리 同質化보다는 異質化가, 또한 統合性보다는支配性이 강화되어온 추세를 보았다. 특히 경제성장에 관한 CMEA 보고서의 주장은 과대평가되었고 西歐보다 월등한 社會的生活水準이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 독자성을 유지해 온 루마니아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실험해 온 헝가리가 폴란드나 동독보다 앞서는 경제발전성과를 이루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조면으로 볼 때 사회주의경제권의 무역증가에도 불구하고 東歐의 대소련의 존도는 강화되어왔다. 동구각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수입에 의존할 뿐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는 소련영토내에서 행해지는 대규모의 합작투자계획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적 의존구조하에 놓이게 되었다. 무역구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東歐에 대해,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금해 왔다는 소련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추정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월선 소규모이며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교역조건면에서도 소련중심의 종속화가 심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같은 무역·조건면에서의 종속구조가 잘 반영되는 것이 CMEA에서의 자본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이차대전이후 처음에는 전쟁배상, 신용공여, 혼합기업의 형태로 東歐의 자원을 착취하였으며 후기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소련영토에의 자본집중화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東歐의 경제발전은 처음부터 자본부족·자본상실에 시달리면서 소련의 경제계획에 예속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東歐 6國의 對西方債務累增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종속논의는 자본주의 경제권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권내에서의 종속화경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권에서는 오히려 중심부가 미국, EC 및 일본 등으로 多角化하는 경향이 있어왔고 특히 서독·일본의 경제력강화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권내에서는 소련일변도의 종속구조가 심화되어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이와같이 CMEA내에서의 종속구조가 심화된 것은 사회주의경제권의 유대관계강화를 일차적 목표로 삼아왔던 CMEA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이다. CMEA라는 경제블럭을 배타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를 능가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형가리학자 라쓰(Racz, 1986)는 CMEA내에서의 미시경제단위간의 협력관계를 검토한 논문에서 CMEA내의 미시경제단위들이 對西方交易을 통해 더 많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이중적

의존체계, 즉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계획경제 내에서의 수직적 의존체계와 여타국가의 수급에 의존하는 CMEA내에서의 의존체계내에서는 헝가리나 유고슬라비아의 부분적 개혁노력도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공유하는 사회주의적 기업의 출현으로만 현재 동구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독립성을 어느정도 회생시키면서도 경제적 자주성 내지는 개혁을 추구해 온 루마니아나 헝가리가 정치적 독립성의 유지에만 집착해 온 폴란드보다 나은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으로서는 루마니아나 헝가리보다 폴란드가 훨씬 더 큰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소련의 경제개혁조치들은 폴란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가 CMEA내에서 이미 형성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종속구조를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개혁의 범위와 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이유는 소련의 대외경제정책은 항상 정치적 고려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소련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CMEA 체제가 와해될 정도로 경제개혁이 추구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CMEA의 정치적 단합에 손상을 준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에는 어떠한 경제회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개입을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参考文獻

Amin, Samir

1974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2 Vol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Ausch, S.

1972 *Theory and Practice of CMEA Cooperation*, Budapest: Akademia.

Beliaer, J.

1973 "National Interests in Socialist Economic Integration," *Voprosy Ekonomiki*, No. 4, pp. 70-79.

Botos, K.

1976 "Coordination of Capital Investment Policies in the Comecon," *Kulkazdasag*,

- December 1974, No. 12, pp. 923-32.
- Brenner, Robert
 1977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New Left Review*, 104, pp. 25-92.
- Caporaso, James A.
 1978 "Dependence, Dependency and Power in the Global System: A Structural and Behavior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78, Vol. 32, Number 1:13-43.
 1984 "Advantage/Disadvantages in the USSR's Trade with Eastern Europe-the Aspects of Prices," *Mimeograph*, The Vienna Institute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 Dietz, Raimund
 1986 "The Impact of Recent World Economic Changes on East-West Trade," *Forschungsberichte* Nr. 119, The Vienna Institute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 Fagen, R.R.
 1978 "A Funny Thing Happened on the Way to the Market: Thoughts on Extending Dependency Ideas,"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78 Vol. 32, Number 1, pp. 287-300.
- Frank, Andre G.
 1972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Galtung, Johan
 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2: 81-117.
 1976 "Conflict on a Global Scale: Social Imperialism and Subimperialism Continues in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World Development* Vol. 4: 4-20.
- Gilbert, Guy J.
 1974 "Socialism and Dependenc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 No. 1: 107-23.
- Graziani, G.
 1986 "Capital Movements within the CMEA," *Soviet and Eastern Foreign Trade*, Vol. XXII, Nr. 1 ASEP, New York.
- Hannigan, J. and McMillan, C.H.,
 1981 "Joint Investment in Resource Development: Sectoral Approaches to Socialist Integration," *East European Economic Assessment*, Vol. 2.
- Höhmann, H.H.
 1986 "East European Economics 1981~1984: Growth Reform and Foreign Trade

- Problems,"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öln.
- Horbath, J.
- 1971 "Grant Elements in Intra-bloc Aid Programs," *ASTE Bulletin* XIII No. 3, Fall 1971.
- Köhler, H.
- 1965 *Economic Integration in the Soviet Bloc- With an East German Case Study*, New York, Praeger, 1965.
- Kornai, Janos
- 1986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V Number 4.
- Laclau, Ernest
- 1971 "Feudalism and Capitalism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67, pp. 19-38.
- Marer, Paul
- 1981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Integration or Domination," *draft prepared for Soviet Foreign Policy in Eastern Europe*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New York).
- Marrese, M. and J. Vanous
- 1983 "Soviet Subsidization of Trade with Eastern Europe-A Soviet Perspective," *Mimeograph*,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ecsi, K.
- 1981 *The Future of Socialist Economic Integration*, Armonk, New York: M.E. Sharpe.
- Racz, Margit
- 1985 "Inter-Country Relations at the Microeconomic Level: The Intra-CMEA and the Hungarian Experience," in *Trends in World Economy*, Hungarian Scientific Council for World Economy, Budapest.
- Ray, David
- 1973 "The Dependency Model of Latin American Underdevelopment: Three Basic Fallacie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15: 4-20.
- Stolper, W.
- 1960 *The Structure of East German Econom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Secreatiat.
- Stolper, W.

- 1983 CMEA: *Figures, Facts, and Arguments*, Moscow Wiener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gleiche (WIIW).
- Stolper, W.
- 1984 CMEA *Foreign Trade Data*.
- World Bank,
- 1986 *World Development Report 1986*, Washington D.C.